

# 비핵화, 김정은으로선 모험... 핵포기 시장가격 탐색중

## 휴전선 없는 한반도

(2부)

### ①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

열강 틈바구니에서 질식해간 한반도가 분단 70여년만에 새 드라마를 쓰고 있다. 제목은 '한반도 평화체제'다. 하지만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상황은 풍전등화다. 북한 비핵화와 경제 제재 완화는 지지부진하다. 지난달 30일 합정역 인근에서 만난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금 핵 포기의 시장가격을 알아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처음부터 모든 카드를 내려놓을 수 없는 북한의 입장을 존중할 때,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북미 간 약속 이행을 강조했지만, 현재 후속 회담이 순조롭지 않다. 연내 종전 선언은 가능할까.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상황이 무거워졌다. 북한은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모라토리엄(무기시험 중단), 유해 송환 4가지를 양보했다. 반면 미국이 종전을 내어주면, 유엔군사령부와 정전 체제, 주한미군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는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회담 당시 굉장히 낙관한 듯하다. 그런데 이것이 실무자의 관행적 기싸움으로 제동이 걸렸을 수 있다."

#### 北 '선 포기 후 보상' 못 받아들여

- 조영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24일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이전이라도 종전 선언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를 두고 안일한 태도가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미국은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 전에 내어 줄 카드가 없다. 북한이 원하는 북미 수교, 평화 협정, 제재 해제 등은 출구 단계다. 북한이 전부 포기한 다음 미국을 믿어야 하는 상황이다.

북한이 볼 때, 미국은 종전선언과 제재 해제를 먼저 줄 수 있다.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지는 북한에게 가역적인 조치다. 반면 종전선언은 비교적 가역성(可逆性)이 적다. 북한은 먼저 4가지를 양보했으니 그 다음 미국이 종전 선언을 돕고 나면 비핵화 조치를 하겠다는 의미다.

북한으로서 끝까지 가는 제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북한도 2022년 경제 5



북한도 성과 있어야... 체재 보장에 종전 선언 의미 커  
미사일 발사장 해체, 종전선언 메시지·비핵화 출발선  
CVID는 모욕적... 자발적 폐기 후 감시체제 만들어야

개년 계획이 있다. 그때까지 어떤 성과도 없으면 곤란해진다. 북한은 체재 보장에 있어 종전 선언도 의미가 크다."

- 북미 간 대화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 올 가을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나.

"9월 유엔 본회의에서 남·북·미·중 정상이 만나면 되는데 물리적으로 어렵다. 미중 관계도 냉각이다. 김 위원장이 과연 종전선언 하나 받으려고 거기까지 가겠는가. 그 전에 어떤 타결이 있어야 한다.

문 대통령이 평양에 가고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대화의 연속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북한이 종전 선언 하나 때문에 거액이 드는 국빈급 초청을 할까.

제일 좋은 시기는 유엔에서 종전선언 하고, 북한의 과감한 비핵화 조치가 이어지는 때다. 지난해 12월 결의된 2397 제재안에는 '끝낸다'는 말만 있지 않다. 유예와 조정, 강화 등이 있다. 조건부 완화 정도로 끌어내면 된다. 북한이 이전으로 돌아가면 제재를 재개하는 '스냅백'을 하면 된다.

트럼프가 미국내 여론을 돌파해야 한다. 비핵화 이전까지 대북 제재를 풀지 않으면, 북한도 못 움직인다. 북한은 자발적 핵 포기 이후 정권이 무너진 리비아를 생각하고 있다."

#### 약속 없던 미사일발사장 해체, 종전 과정 삼아야

- 북한의 4가지 조치 중 동창리 서해위성 발사장 해체를 어떻게 봐야 하나.

"북한이 6월 12일에 약속한 내용이 아

니다. 선의로 하는 일인데 검증이 안 됐다. 부족하다고 하는 태도는 순서에 맞지 않다. 북한은 (일련의 과정을) 할 테니까 종전선언 하라는 메시지다. 한국은 종전 직후 북한이 할 일을 합의하는 과정을 끝내야 한다."

- 그것이 비핵화인가.

"비핵화의 출발선이다. 북한은 '우리가 이만큼 갔으니 미국도 나와라' 하는 태도를 견지한다. 같은 단계를 밟아가자는 의미다."

- 종전 선언 다음은 뭐가.

"프론트 로딩(front loading·전진 배치)이다. 북한의 선제조치이다. 핵 신고서 제출과 사찰과 검증이다. 미국과 북한의 입장은 확연히 다르다. 북한은 기존 시설 폐기를 먼저 하고, 미래 핵 개발도 안 한다는 입장이다. 핵무기는 이미 완성됐으니 마지막에 처리한다는 의미다.

반면 미국은 완성된 무기 폐기를 먼저 하라는 입장이다. 그런데 북한이 이걸 버리면 마지막 카드가 없어진다. 그래서 한국은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적어도 미국이 원하는 ICBM 정리 정도는 하라는 입장이다."

#### 북한 압박, 미국에겐 '딜레마'

- 그런데 미국이 정말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는지 의문이다. '위험한 북한'은 주한미군을 포함한 동북아 군사 전력 배치와 영향력 행사에 명분을 주고 있지 않은가.

"미국의 전략일 수도 딜레마일 수도 있다. 우선 전략적으로 미국의 목적은 중국 봉쇄다. 이를 위해 한·미·일 군사 협력 동맹이 있는데, 북한 도발이 정당화

를 시켜준다.

딜레마는 북한 핵 문제가 미국내 정치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또한 미국이 말하는 전세계 비핵화에 대한 도전이다. 이용 가치가 있으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 일각에서 1975년 헬싱키 협정을 이야기한다. 동서 냉전 종식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현재 상황에 참고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진보 정부는 헬싱키 프로세스의 교류 협력 활성화를 강조한다. 반면 한국 보수와 미국, 일본은 인권을 앞에 세운다. 북한 인권 문제 해결 전에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태도다.

양쪽 다 순서 문제이다. 하지만 왜곡된 주장이 많다. 헬싱키 협정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차'다. 평화 공존, 불가침을 먼저 하고 인권을 다뤘다. 지금 앞 부분에 요구되는 것이 많은데, 거기에 인권과 생화학 무기도 다 넣으면 북한이 움직일 리 없다."

#### CVID는 '북한 굴욕' 신화 자발적 폐기가 먼저

- 미 공화당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에 대해 군사적 옵션을 계속 가져가야 한다고 한다.

"CVID는 일종의 신화 혹은 근본주의 처럼 되어 버렸다. 북한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단어다.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하는 모양새가 되어야지, 미국의 압박에 끌려다니는 모양새가 되면 정권에 위협이 된다.

미국이 모든 조건을 인질로 만들면, 북한이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작동 가능한 CVID(Operational CVID)를 주장한다. 일단 북한의 자발적 핵 폐기를 C(완전한)로 받아들이야 한다. 그 다음에 북한이 핵 개발을 재개 못하는 감시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짧은 시간 안에 비핵화

를 할 수 있다."

- 감시체제는 어떻게 만드나.

"북한이 다시 NPT에 참여하든, 중국·러시아·한국·미국·일본의 다자 감시 체제를 만들면 된다. 북한이 체제 보장을 안심하기 전까지 핵 개발 인력과 기술을 없애는 건 무리다. 북한도 마지막 카드는 있어야 하지 않나. 우선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 다자 감시 시스템을 만들면, 그때 북한이 기술자 해체 등을 할 수 있겠다. 북한이 물리적으로 2년 시한은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 김정은의 비핵화는 '모험' 시장가격 맞춰야

- 혹자는 북한의 상황을 자동차에 비유한다. 북한이 고생해서 중형차를 만들었는데, 그 차를 포기하면 신형 고급차를 준다는 제안을 과연 받아들일지느냐는 논리다.

"뜨거운 논쟁거리다. 그런데 선대와 달리 수십년을 살아야 할 김정은은 비전 문제에 직면했다. 지금 핵 포기에 대한 가격이 얼마인지 시장가격을 알아본다고 생각한다. 값이 맞을 때 핵을 포기할 수 있다. 자동차 비유는 너무 극단적이다."

- (김정은이) '나도 얼마든지 가격적일 수 있다'라는 의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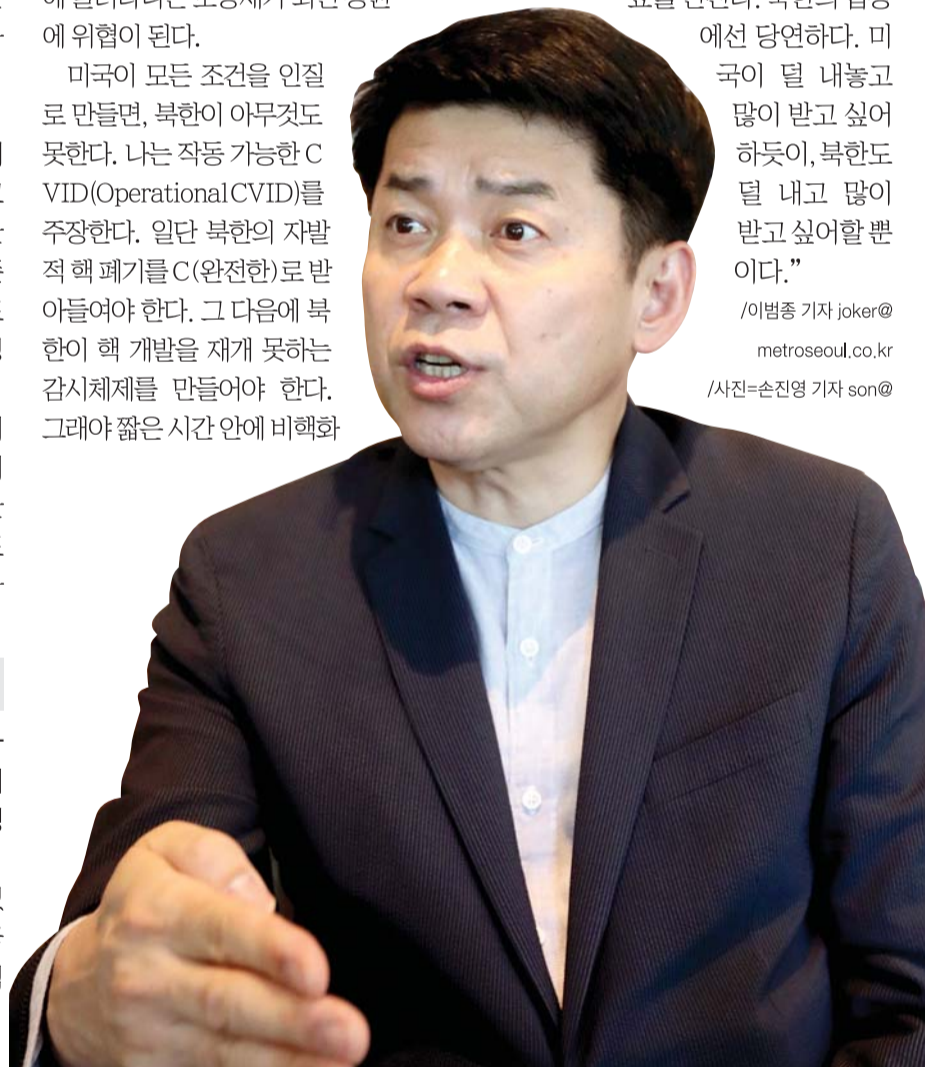
"미국과 우리는 북한이 '핵 포기한다 해놓고 왜 질질 끌지'라는 의문 표를 던진다. 북한의 입장

에선 당연하다. 미국이 덜 내놓고 많이 받고 싶어 하듯이, 북한도 덜 내고 많이 받고 싶어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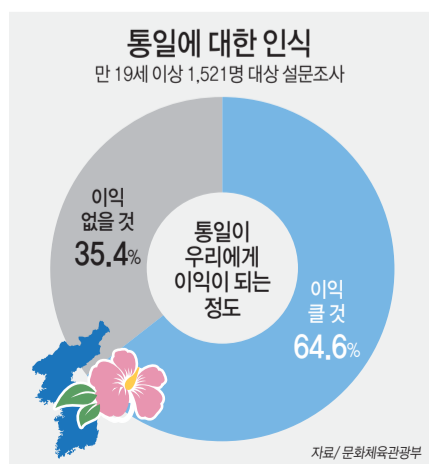
/이범종 기자 joker@

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 국민 80% '통일' 가능하다... 위협적이지만 협력 대상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남북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은 '통일로 인한 이익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는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이자 '협력해야 할 대상'이란 상충된 인식이 공존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이와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한미, 북미관계에 우선해 '남북관계'가 중요하다는 의

견이 월등하게 나타났다.

3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주요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152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웹 조사(CAWI: 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5%포인트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국민들의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해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문체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문체부는 격월 간격으로 이 조사를 계속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3.5%는 장기적(79.6%) 혹은 이른 시일 내(3.9%)에 '남북통일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일로 인한 이익이 클 것'이라는 응답은 64.6%로, 국민 상당수가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주민을 한민족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은 83.6%로 '그렇지 않다' (16.4%)라는 응답을 크게 상회했

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78.4%) ▲우리가 경제해야 할 대상(70.2%)이라는 부정적 응답과 ▲우리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77.6%) ▲궁극적으로 통일의 대상(76.3%)이라는 긍정적 응답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북한에 대한 상충된 인식이 공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의 향후 변화에 대해 적극적인 소극적이든 '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은 85.1%로 높은 반면,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33.7%)보다 '포기하지 않을 것' (43.2%)이라는 부정 전망이 우세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